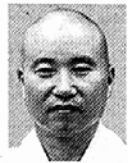


목어

3·1절과 화합의 날

한반도 5천년 역사상 3·1절만큼 한겨레가 한 마음, 한 소원으로 함께 행동한 적이 없다. 3·1절은 한민족이 하나된 자주 독립의 자존심이다.



82년전 3월 1일 우리 겨레는 남부노소, 빈부귀천, 도시와 농촌, 종교와 사상 등 모든 갈등과 벽을 허물고 오직 하나인 독립만세를 불렀다. 그러나 해마다 맞는 82번째의 3·1절이지만 우리네 현실은 남북분단과 지역감정 등으로 선조들의 얼을 받들어 화합과 평화의 독립 정신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번 3·1절에도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 등 7개 종단으로 구성된 '한겨레 손잡기 운동본부'는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중앙박물관 앞 광장에서 '겨레에게 새 희망을'이란 주제를 걸고 합동행사를 진행하였다. 7개 교단은 이날을 '화해 평화의 날'로 선언하고 조상들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한겨레의 통일과 화합을 이루어 화해와 평화의 한민족이 되자는 희망찬 염원을 함께 하였다.

우리는 3·1절을 맞이하면서 선조들이 왜 온몸이 찢어지는 고문과 죽을 앞에서도 오로지 독립을 위해서, 오로지 나라만을 위해서 어떤 정신으로 극복했는가를 꼭 상기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 국민이 우리의 국적을 유지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독립을 위해 희생했던 수많은 선조들의 나라 잃은 설움에 대한 투지와 결연의 정신 공덕임을 인식해야 하지만, 우리는 3·1절을 맞아 그저 단순히 매년 치르는 하나의 행사로서 지나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현실에서 주어진 남북 평화통일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과 종교간의 갈등이 반드시 해소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피부로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이 두 가지 갈등만이라도 시급히 해소하고 화합과 상생의 길로 한마음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다면 통일과 민족 화합의 길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법산(동국대 정각원장·본지 논설위원)

“군불교위 설치” 물밑 움직임

군승단해체 파문 이후

군승단의 한시적 해체로 군포교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포교원과 군승단이 이번 사태로 군포교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는데 공감,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군포교를 전담할 종단 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군불교위원회 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군승단·포교원 움직임 정선진 선임법사와 이희용 법사는 2월 22일 군승총회에서 결정된 군승단 한시적 해체에 대해 포교원을 방문해 경과 보고를 했다. 하지만 포교원은 경과보고가 미진하다며 2월 28일까지 경위 보고서를 제출을 요구했다. 2월 28일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포교원을 방문한 정선진 법사는 포교부장 상운스님과 환담자리에서 군승단의 앞날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날 양측은 군포교의 밝은 미래를 위해 앞으로는 불협화음과 갈등보다는 서로 합심하여 군포교에 매진하자는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양측은 이번 주 종각 각 선임법사와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포교원은 새 포교원장이 취임하면 포교원에 군승총회를 소집해 군승단 집행부 구성을 유도하고, 군불교위원회 설치를 논의할 방침이다. 군승단도 현재

포교원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군불교위원회의장 정선진 선임법사와 이희용 법사는 2월 22일 군승총회에서 결정된 군승단 한시적 해체에 대해 포교원을 방문해 경과 보고를 했다. 하지만 포교원은 경과보고가 미진하다며 2월 28일까지 경위 보고서를 제출을 요구했다. 2월 28일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포교원을 방문한 정선진 법사는 포교부장 상운스님과 환담자리에서 군승단의 앞날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날 양측은 군포교의 밝은 미래를 위해 앞으로는 불협화음과 갈등보다는 서로 합심하여 군포교에 매진하자는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양측은 이번 주 종각 각 선임법사와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포교원은 새 포교원장이 취임하면 포교원에 군승총회를 소집해 군승단 집행부 구성을 유도하고, 군불교위원회 설치를 논의할 방침이다. 군승단도 현재

이같은 인식을 토대로 군승단은 원로스님, 예비 및 현역 법사, 포교원 포교국장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군불교 위원 가운데 현역 군승을 과반수 이상인 12명을 임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달리 포교원은 위원장은 군포교 원력과 경험있는 승랍 20년 이상 스님으로 군불교위원회의 추천으로 포교원장이

군포교 주체-인사권 등 군법사-포교원 입장차

“갈등 끝내고 서로 합심”

임명하고, 군승총회는 위원장 및 현역군승으로 구성된 군승회의로 전환해 군불교의 전반적인 사업 및 군승 상호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사업까지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또 원활한 군포교 정책 수립을 위해 군불교위원으로 현역 군법사를 6명 정도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군승단·포교원의 문제점 포교원과 군승단은 그동안 군포교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수차례 군불교위원회 설치를 논의했고 공청회도 개최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의견교환을 보지 못해 이미 서로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다.

다수 군법사들은 군불교위원회 설치 중단의 일방적인 종책이라 생각한다. 특히 군불교위원회가 설치되면 이미 결촌한 법사들이 비구 법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급, 보직이 등 인사문제에 불



○군승단 해체 파문이 조기 해결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군불교위원회 설치에 관한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반아침잠을 풍족하는 모습.

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군포교의 활성화는 밝은미래를 보지 않고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포교원도 군승단을 관리 감독한다는 명분으로 <법화와 설법>지에 실린 기사처럼 군승단을 문제의 집단으로 매도해서는 안된다. 또한 타종단에 군승을 개방하지 않고 조계종 승려에게만 열어두고 있는 것도 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포교의 올바른 청사진 군에 파견된 군승장교는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조계종 종책을 대내외적으로 시행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군승단을 군불교위원회로 전환해 대내외적인 군포교 사업을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불교위원회는 군불교의 대내외적인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고 군승교 및 활동 강화와 군 불자들의 신행 활성화 및 종단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는 군포교 업무를 총괄하는 종단기구이기 때문이다. 또한 군불교위원회 설치로 인해 군승 및 군포교 사업에 대한 봉송과 협조체계가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군포교의 밝은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양측의 합의로 조속한 시일내에 군불교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두식 기자(dooobi@buddhapia.com)

회비 안내면 제재

종단협 미납회비 1억 넘어

종단협의회가 회비 미납 종단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회비를 내지 않으면 밀어낸다는 방침이다. 회비와 행사비 분담금 미납 액수가 1억원을 넘어섰고, 사업집행에 차질을 빚는 것을 계속할 수 없다는 뜻이다.

회원들의 회비는 모임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 교계의 많은 단체들이 재정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26개 종단의 협의기구인 종단협의회도 예외가 아니다.

27일 열린 정기총회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정기회비 체납액이 8640만원에 이른다. 회원 종단의 절반이 넘는 15개 종단이 60만원에서 1050만원을 내지 못했다. 법상종은 3년, 원효종은 2년치 회비를 내지 않았다.

여기에다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8.15남북통일대회, 한중일 국제심포지엄 등 각종 행사비를 내지 않은 종단도 12개 종단, 액수로는 2090만원이다. 상임이사 종단도 포함되어 있어 분담금 납부에 대한 둔감함을 보여준다.

회비와 행사분담금 미납액을 합치면 1억원을 넘는다. 지난해 세출액 6억1665만원의 17.4%에 이르는 액수다. 이런 실정이다보니 '정기회비와 각종 사업비 분담금 미납 종단이 많아 사업 추진이 계획보다 축소 또는 시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회원종단의 책임있는 참여가 요구됨'이라는 감사보고서를 낼 수밖에 없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정기회비 및 사업분담



○2월 27일 열린 종단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인 성호 진 각종 총리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 미납 종단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안전에 올랐고, 활발한 의견이 나왔다. '99년도에 방금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동사실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성직의 문제이다. 종단에서 1년 예산을 편성할텐데, 또 탕감하는 것은 창피스러운 일이다.' 반면, '미납 액수가 많아 부담스러운 종단도 있을 것이다. 절반 정도로 탕감하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결론은, 5월 31일까지 내지 않으면 자진 탈퇴를 종용하고, 탈퇴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매우 강도 높은 조치이다. 96년도에도 회비를 내지 않아 정토종과 천화불교 등 2개 종단에 대해 제명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조계종 법인법 제정 추진

종단등록 의무화 등 삼보정재 유실 최소화

조계종 총무원(원장 정대은)은 2월 27일 열린 총무원회에서 법인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법인법(안)을 마련,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총무원은 20일부터 열리는 총회에 법인법 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총무원은 법인법 제정 이유를 "종원 9조의 법인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종단과 법인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한편, "종원 9조 3항에는 '법인을 설립할 때는 3개 정관에 당해 법인이 분종관장하에 있음을 명기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없다. 따라서 법인법을 마련해 사찰에서의 법인 설립을 장려하되, 종단등록 및 변동사항 등의 보고를 의무화해 삼보정재의 유실을 막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사찰에서 공공성을 지닌 법인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자칫 사찰 재산을 빼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법인 설립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많았다. 종원 제 개정특위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한 위원은 "사찰의 지역사회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확보한 법인 설립이 필요하다"며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에서의 "사찰의 재산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개인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총무원이 마련한 법인법(안)에 따르면, 사찰 재산을 출연하여 법인을 설립하려 할 때는 사전에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립 후 반드시 종단에 등록해야 한다. 법인의 명칭에 대한 불교 조계종'을 삽입해야 하며, 정관상의 목적에도 '조계종의 종지와 종통을 받든다'는 의미의 문구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사 수는 조계종 승려를 다수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임원과 재산 현황, 정관 개정, 이사 변동 시 총무원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법인의 인사권 운영관리권 등 법인 고유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기존 법인은 1년 이내에 종단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성운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관삼. 대표전화: 02-737-8881. 인터넷: www.buddhanews.com.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큰스님 초청 국제보살계 수계법회. 행사내용: 산신, 칠성, 신중, 독성 탕화 점안 법회. 3월 14일(음력2월20일) 수요일 오전 10시.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국제보살계 수계법회: 3월 14일(음력2월20일) 수요일 오전 11시. 사리친견 및 소원성취 가족기도: 3월 14일부터 5월 1일(부처님오신날)까지 매일 오전 10시. 3화상 초청 법회: 3월 14일(운경큰스님), 3월 25일(법현스님), 4월 11일(도선스님). 동참 문의: 031-473-5042(종무소).